

"科技발전계획수립에 과학기술인총의 수렴을"

「신한국 창조」위한 과학기술진흥 종합건의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총 본산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지난해 11월 18일 3당 대통령후보자초청 정책대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산학학회 및 연구소의 주요인사들과 연쇄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종합건의문」을 관계당국 및 사회각계에 전달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세계는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개편되는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환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국제질서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안보개념이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책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보호주의 내지 기술민족주의와 기술패권주의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국가 최고통치자의 최대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학기술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정부의 시책은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주도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정치논리에 밀리고 있듯이 우리의 과학기술은 정치와 경제논리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부처에 따라 각각 다르고 과학기술 관련 예산도 획일적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를 달

성하는 데에도 애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제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을 이룩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혁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전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도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경제계와 정계에서 마저 국가발전에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과학기술의 현황과 당면과제에서 처방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대선기간중 제시된 과학기술 정책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500만 과학기술인들은 국내외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가원수를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는 물론 정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오니 각별하신 배려로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져 온 국민이 바라는 복지국가가 이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국가 차원의 합리적 과학기술발

전 장기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처차원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있어도 과학기술인들의 총의가 수렴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말할 것 없고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분명한 「국가과학기술개발전략과 장기발전계획」이 마련되어 「우리의 과학기술」이 창출되어야 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예산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약속하고 있는 바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실천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투자를 막연히 2001년까지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의지가 정부예산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의 제정등 분명한 가시적인 방법으로 정부 과학기술예산비율을 연차적으로 대폭 끌어올림과 동시에 다

른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와함께 한정된 과학기술부문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종합선심제가 보다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혁신적인 개편이 절실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처가 있지만 기획과 조정 기능에 머물고 있어서 계획을 실행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체에 기획과 수행기능이 함께 주어지는 과학기술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처를 기획, 조정 기능과 집행기능이 함께 부여된 위상으로 격상하여 주시고 대통령직속하에 「과학기술담담특보」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가의 주요정책 수립에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식견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요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겠습니까. 정부기관은 물론 국회에도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전문가들을 많이 등용하여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결실을 얻을수 있도록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학기술교육진흥과 과학기술품토조성도 적극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학기술현실은 선진외국기술의 도입이나 개량에 의한 모방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기술중속국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력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회의 육성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에서 창의적인 과학기술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까. 아울러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며 합리, 능률, 창조의 과학기술정신이 국민의식속에 자리잡는 「전국민과학화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도 현재 추진중인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에 특단의 지원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부사항

과학기술정책

1. 2000년까지 과학기술투자규모를 GNP대비 5%로 확대
2. 과학기술우위정책 구현을 통하여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선진 7개국권 진입
3. 정부지원하에 현재 건립중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한 건립비 적극 지원
4. 우수과학기술인에게 포상 확대 등 과학기술인 우대풍토조성
5. 연구개발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제정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령제정
6.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기술의 개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환경기술·의료기술·교통 및 주택기술개발에 집중노력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역주민 합의하에 추진하되 안정성확보, 건강보장, 적정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7. 정부의 과학기술관련부처 및 기관인 사요직에 과학기술전문가를 배치
8.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9. 청와대에 「과학기술특보」신설
10. 기술개발투자 유도를 위하여 현행 과학기술관련제도·법령·세계 등을 개편
11. 과학기술진흥의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특별회계를 별도 설치 운영

12.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 지원

13. 과학기술국제협력활동의 강화 및 국제회의장 건립운영

14. 정보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정보센터의 독립운영

15. 기초과학 육성 및 과학기술관련학회 지원강화

16. 산·학·연 협동촉진법의 제정

17. 과학기술연구조정평가제도의 설치 운영

18.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기반기획

19. 한국형 기술특화사업의 개발육성과 핵심첨단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 및 인력양성

1. 이공계대학의 연구시설투자 지원확대 및 기초연구비지원 대폭증액
2. 중장기우수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공공 확대
3. 공업계고교 및 전문대학 등 중저급산업기술인력양성교육기관의 확대 및 지원
4. 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유치활용

출연연구기관의 활성화

1.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업적 평가와 자율성보장 등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선
2. 고가기자재의 확충
3. 급여의 현실화와 복리후생제도 확대
4. 출연연구기관의 지역분원 설치

과학기술품토조성

1. 국민과학화운동 전개 등 과학기술품토조성사업의 전개
2. 국민의 과학기술생활화를 위한 과학기술 보급 촉진
 - ▲1가구 1컴퓨터 보급과 각종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 ▲각종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정보 활용실현